

#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4-8호

발행일: 2024. 11. 22. (금)

제418회 국회(정기회, 2024. 9. 2. ~ 2024. 12. 10.)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 목 차

### 1. 개관

###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가. 주거복지 지원 강화

나.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 1. 개관

제418회 국회(정기회)는 2024년 9월 2일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 10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12차 본회의에서 주요 법률안 27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18회 국회 제12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3) 6년간의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18회 국회의 2024년 11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률안 27건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   | 소관위원회(건)         | 의안명  | 제안자           |
|---|------------------|--|---------------|
| 1 | 국회운영위원회(3)       | <a href="#">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 국회운영위원장       |
| 2 |                  | <a href="#">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a>                         | 서일준 의원 등 10인  |
| 3 |                  | <a href="#">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 정부            |
| 4 | 법제사법위원회(1)       | <a href="#">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 법제사법위원장       |
| 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 | <a h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 6 | 국방위원회(7)         | <a href="#">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 국방위원장         |
| 7 |                  | <a href="#">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 국방위원장         |
| 8 |                  | <a href="#">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 국방위원장         |
| 9 |                  | <a href="#">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 국방위원장         |

|    | 소관위원회(건)         | 의안명  | 제안자           |
|----|------------------|--|---------------|
| 10 |                  | <a href="#">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 이수진 의원 등 11인  |
| 11 |                  | <a href="#">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 한기호 의원 등 10인  |
| 12 |                  | <a href="#">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a>                    | 구자근 의원 등 11인  |
| 13 | 행정안전위원회(3)       | <a href="#">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 행정안전위원장       |
| 14 |                  | <a href="#">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 행정안전위원장       |
| 15 |                  | <a href="#">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 행정안전위원장       |
| 1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 | <a href="#">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a>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 17 | 보건복지위원회(1)       | <a href="#">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 보건복지위원장       |
| 18 | 국토교통위원회(9)       | <a href="#">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 국토교통위원장       |
| 19 |                  | <a href="#">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 국토교통위원장       |
| 20 |                  | <a href="#">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 국토교통위원장       |
| 21 |                  | <a href="#">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 국토교통위원장       |
| 22 |                  | <a href="#">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a>                                   | 김미애 의원 등 10인  |
| 23 |                  | <a href="#">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a>                                | 권영진 의원 등 19인  |
| 24 |                  | <a href="#">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a>                              | 윤종균 의원 등 20인  |
| 25 |                  | <a href="#">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                                    | 윤종균 의원 등 11인  |
| 26 |                  | <a href="#">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                   | 권영세 의원 등 10인  |

|    | 소관위원회(건)   | 의안명                                  | 제안자     |
|----|------------|--------------------------------------|---------|
| 27 | 여성가족위원회(1) | <a href="#">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 여성가족위원장 |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주거복지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이슈를 다룹니다.

## 2. 주요 법정책 이슈

### 가. 주거복지 지원 강화

#### 개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함께,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 시장 소외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지원 확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본회의에서는 비아파트로 한정해 6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   | 소관 상임위원회 | 의안명과 주요 내용   | 의결일자<br>(본회의 결과)     |
|---|----------|--|----------------------|
| 1 | 국토교통위원회  | <a href="#">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br>가. 1인 가구의 증가 등 주택수요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공급은 위축되고 있는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 2024-11-14<br>(원안가결) |

|  | 소관 상임위원회 | 의안명과 주요 내용  | 의결일자<br>(본회의 결과) |
|--|----------|---|------------------|
|  |          | <p>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사업자가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일정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2호의2 신설).</p> <p>다. 보증회사가 등록 말소요건이 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적인 보증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해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및 제9항 신설).</p> |                  |

## 정책 동향

### [120대 국정과제]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부)

#### 과제목표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장

####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 질적 혁신 추진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을 적용하여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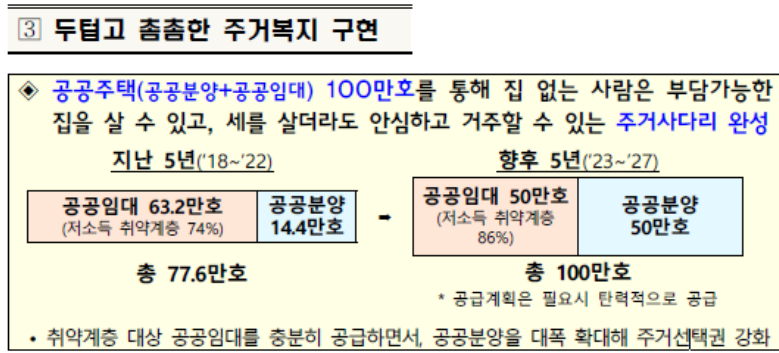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추진

(취약계층 지원 강화)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입주 희망자에게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 추천

### 2023 정부 업무보고(국토교통부, 2023. 1. 3.)



### ①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나눔·선택·일반형) 새 브랜드로 '뉴:홈' 선정
  - \* '첫집, '새 주거문화, '희망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국민제안선호도조사(22.11)를 통해 선정
  - 뉴:홈(23~'27 총 50만호) 공급을 위해 '23년부터 공공택지, 도심 등 우수입지에서 지구계획 변경, 인허가 등 추진
  - '23년 총 7천호 사전청약(7·12월) 공고를 통해 조기공급('22.12월 공고분 2,298호는 '23.2월부터 접수시작)
- (공공임대) 수도권(75만호 이상) 등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신규 공공임대 총 10.7만호(통합건설 3.5만, 매입 3.5만, 전세 3.7만) 공급 추진
  - 공공임대에 대한 차별과 배제 해소를 위해 민간 브랜드 또는 입주민 희망 단지명을 사용\*하는 방안 시범 도입
    - \* '23년 시범사업(신축·과천지식정보타운, 남양주별내 기축 : 서울강남3, 도봉) 후 확대 추진
  - 공공분양+공공임대 혼합 배치, 민간분양+공공임대 혼합 조건부 택지 매각도 확대하여 소셜믹스 적극 유도
  - 공급면적을 확대\*하고, 빌트인 품목 및 마감재 개선 항목 확대,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품질 개선
    - \* 3기 신도시 승인물량은 57→67㎡(공급면적), 미착공 행복주택은 14→20㎡(전용면적) 등
  - 고령자(무장애 설계 등, 1천호), 청년(일자리 연계, 4천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의료, 복지서비스 등 특화 임대주택 공급
- (주거안전망) 복지부 정보망 등과 연계하여 주거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주거지원\* 및 공공임대 우선공급과 연계 지원
  - \* 현 재해·재난 이재민 한해 지원(최대 2년) → 경제적 위기가구 추가 검토
  - 주거복지센터 기능 강화(표준매뉴얼 마련)로 취약계층 선제 지원, 영구임대 내 주거복지사 확대 배치(15→111곳)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독거노인, 정신위기가구 등에 맞춤형 상담·안내, 돌봄서비스 등 제공
  - 공공임대 입주정보 등을 활용하여 주거급여 미수급자를 발굴하고, 주거급여 대상도 확대('22, 중위 46% 133만 → '23, 47% 146만 → '27, 50% 175만가구)
  - 전국 장애인 가구에 안전손잡이·단차계거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참고 자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문진석 의원안: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2024. 8.
- [김상훈 의원안: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 신설 등](#) 2024. 8.
- [원룸·오피스텔의 관리와 1인가구 주거복지 실현방안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 [초저출산·초고령 저성장사회 주거복지 혁신방안세미나](#)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 [문재인정부 국정백서\(복지\\_제9권 모두가 누리는 포용국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2022. 10. 27.

이 보고서에서는 주거기본법 및 관련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가 주거복지전달체계의 일부로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확대 및 운영 개선에 있어 논의할 만한 향후 과제를 제시함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제도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KRIHS 보고서 기본 21-38 2021. 12. 31.

1.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정책의 지원규모와 지역 배분의 적절성, 개별 가구에 미치는 정책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주거복지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2. 주거복지 정책은 개별 가구와 지역경제에 큰 정책효과
  - 두 정책은 저소득 대상가구(4분위 무주택 공공임대 수요가구)규모의 80.8%를 지원하는 효과, 공공임대주택재고는 수요의 57.0%, 주거급여는 68.2%를 지원
  - 모두 임대료 절감효과가 크고 공공임대주택은 월평균 약 30만원의 임대료 절감효과, 주거급여 RIR 하락효과가 크나, 주거의 질적 상향효과는 개선필요
3.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급여는 신규건설투자와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에 영향
  - 공공임대주택은 신규건설(208조 파급효과)과 주거비절감(4조 9천억 파급효과), 주거급여는 16조의 파급효과. 두 정책으로 인한 부가가치는 GDP의 0.08% 기여('16~'19)

## 나.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 개요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 여가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220만 원)은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389만 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산은 전체 가구(3억 4,042만 원)의 1/4, 자가 비율(24.5%) 역시 전체 가구(37.7%)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지원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이 지원되고 있고, 임대 주택 입주 자격도 부여하며,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 시 일정 비율을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분양합니다. 이 외에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통해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가족정책 사각지대 해소 목적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의 일환으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본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 맞춤형 복지지원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   | 소관 상임위원회 | 의안명과 주요 내용   | 의결일자<br>(본회의 결과)     |
|---|----------|--|----------------------|
| 1 | 여성가족위원회  | <p><b>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p> <p>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상태 등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학업지원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더불어, 취약 환경에서 출생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 검사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p> | 2024-11-14<br>(원안가결) |

##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 과제목표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를 통한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조성  
이주민 인권개선 등을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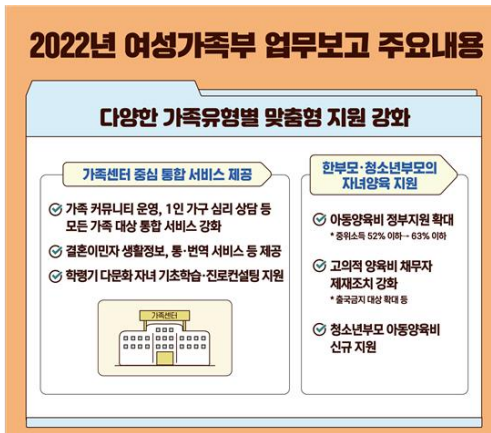
###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진로·직업 교육훈련 확대, 청소년(靑少年)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 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 교정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통한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이주민 인권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  
(동물복지 강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

\*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 (법정형 최대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여성가족부, 2022. 7. 25.)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3 정부 업무보고(여성가족부, 2023. 1. 9.)

1. 다양한 가족을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 52% → 60% (청소년한부모 60% → 65%)
-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 강화로 양육비 이행률 제고('22년 40.3%→'27년 55%)

□ 한부모가족 생활 지원 및 양육비 이행을 제고

- (생활 안정)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가족센터 맞춤형 사례 관리 전국 확대 등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3~'27) 수립('23.2월)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22) 기준중위소득 52% → ('23) 60%
- (양육비 이행)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와 위탁 소송 모니터링 강화, 면접교섭 서비스 및 정보제공·상담 전국 확대  
\* 양육비 채무자 소득 재산 조회 근거 마련 명단 공개 의견진술기간 단축(90일→10일 이상)  
\*\* 양육비 이행률 목표: ('22) 40.3% → ('27) 55%
- (자립 역량) 내일이룸학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하여 직업 훈련 과정 참여 확대 및 새일여성인턴 우선 선발 등 자립 역량 제고

□ 청소년(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 지원 강화

- (양육 지원)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기간 : ('22) 6개월 → ('23) 12개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기준 : ('22) 기준중위소득 60% → ('23) 65%
- (자립 지원) 청소년(한)부모의 상황을 반영한 자립촉진 수당 지급 요건 완화 등 구직활동 지원, 가족센터를 통한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강화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참고 자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24. 9.

한병도 의원안: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등 추가

[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정책대안 : 빈곤아동 정책 자문위원회 1차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등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문재인정부 국정백서\(복지\\_제9권 모두가 누리는 포용국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누리집

[가난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 자녀 임시위탁 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보완 필요성](#)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4. 1. 25.

한부모가족 지원 중 주거지원은 경제적 곤란에 빠진 한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채무를 갚는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에 맡겼다가 다시 되찾아 오려고 할 때, 현행 법률상 한부모가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공공임대주택 등을 신청할 수 없다. 이에 공공임대 지원자격을 보완하여 자녀와 일시 분리된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2022. 8. 24.

본 보고서는 미혼부모·한부모가족의 제도 접근성, 이용 경험, 제도 활용을 통한 자립 가능성을 탐색하고, 미혼부모·한부모의 자립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여가부) 2022. 12.

한부모가족 지원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본 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체계적 정책틀로서 기본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여가부) 2021. 12.

한부모가족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한부모가족은 우리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또한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음.

○ 비록 모든 한부모가족이 양육 또는 생계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의 실태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한부모가족은 고립된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종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 혼자 양육과 생계를 전담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책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로서 신뢰할 만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중략)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